

지역문제 해결의 Co-creation 접근

: 안전도시사례를 중심으로*

Co-creation Approach of Regional Problem Solving

: Focused on Safety Community Cases

한 세 역**

Han, Saeek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고찰 및 분석 틀
- III. 국내외 사례분석 : 비교분석 및 시사점
- IV. 시민참여기반 안전관리체계의 가능성과 실천과제
- V. 결어

지금까지 공공문제 해결과정에서 관주도의 하향적(top-down)방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급변하는 위험환경에의 대응을 위해 공동체구성원의 참여, 소통, 협력의 바탕에서 문제해결을 넘어 가치창출을 위한 대안적 시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공동가치 창출(Co-creation)의 의미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차원에서 전개된 안전도시 공인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접근의 본질을 고찰하고, 안전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선진 안전도시인 레드세핑과 토론토는 안전가치와 요구에 부응하여 안전네트워크, 프로그램 그리고 상호협력체계의 바탕에서 시민참여 및 시민주도형으로 전개되면서 안전가치가 시민생활에 투영되고 안전체계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천안시와 차별성을 드러냈다. 장차 국내의 지역사회가 안전공동체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안전 Co-creation체계가 요구되는 바 시민참여기반에서 안전도시 관련 법제도와 운영시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교수

논문 접수일: 2015.11.09, 심사기간(1, 2차): 2015.11.09~2016.01.29, 게재확정일: 2016.01.29

스텝, 안전한 생활공간을 위한 교통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 각종 재난 재해대비 관련 끊임 없는 자발적 노력이 실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 지역문제, 안전도시, 재난관리체계와 프로그램, 공동가치창출

Whatsoever the situation and the environment changes, the responses also change accordingly. The government exists to solve public problems. Recently, community responsibility of the safety project is gradually increasing. Therefore, the local government is expanding its role, taking over more of the management of the Safety Community program and attempting to raise funds from central government and businesses to make it sustainable. This study draws on experiences of safety community program and research about advanced cases of safety communities. The case studies examine the two locations, setting out the local context for describing the process, results and lessons learnt. This alternatives are necessary and important, and recent years have seen an increase in participatory and community-based approaches to issues like policing, small arms control and crime prevention.

□ Keywords : Regional Problem, Safety community, Disaster management system & Program, Co-creation

I. 서론

오늘날 지방행정에 제기된 문제는 지역사회구성원에 의해 제기된 불만족스러운 상태로서 고령화, 빈곤, 실업문제 등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방행정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발생하지 않는다. 해결 불가능한 골치 아픈 난제(wicked problem)가 많다. 그 중 하나가 안전문제 아닐까? 우리나라 사망통계에서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자수에서 한국은 일본의 4배, OECD 평균의 2.5배를 웃돈다(뉴시스, 2012년7월19일자). 지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도시화와 노후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재해 취약성 증가, 반복·심화되는 재난, 정체성 없는 지역재개발, 소득격차 심화 등 지역현상에 투영된 다양한 요구들은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현실적으로 지역주민 삶을 위협하는 사건과 사고도 끊임없으며 재난 및 위기관리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도시환경의 복잡성 증대로 인해 불안정성도 고조되고 있다. 특정 시기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해, 화재, 산

불 등 전통적 재난관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손상 및 사고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재난 재해관리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방지를 넘어 인간으로서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절실하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641). 국민안전에 관한 기본권은 국가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임무로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인식된다(유현정·이재은·류상일, 2007). 하지만 지역주민 삶의 질과 경쟁력을 담보하는 기본조건으로서 안전문제 대한 정부대응은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가?

지금까지 중앙이건 지방이건 안전문제 해결과정에서 관주도의 하향적(top-down)방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안전정책의 공감대미흡과 실효성 저하 등 문제 상황과 급변하는 환경에 창조적 대응이 요구된다.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참여, 소통, 협력의 바탕에서 문제해결을 넘어 가치창출을 위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공동가치 창출(Co-creation)의 가능성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사회혁신의 맥락에서 한국, 스웨덴, 캐나다의 안전도시 공인사례를 바탕으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시각의 성격과 의미를 고찰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및 분석 틀

1. 지역 및 공공문제에 대한 접근과 한계

근대국가이후 과학기술의 발달,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가들이 국정운영에 참여하면서 공공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도시화, 산업화, 보건 및 위생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운영은 과학적 지식과 합리적 사고에 준거한 정책과정에서 합리적-기술적 접근을 따랐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정책상황이 급변하면서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즉 공공문제의 복잡성, 다원성의 증대에 따라 문제가 난제로 변화하면서 공학적 접근에 의한 문제해결방법은 종언을 고했다(Rittel and Webber, 1973). 사실 정책은 개인을 넘어 집합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다(김영평, 1984: 92).

정책문제는 다수의 이해당사자 조직들이 관련된다. 더구나 정책은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정이기 때문에 한 쪽에 자원이 배분되면 다른 쪽으로는 그만큼 적게 배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충적이다. 공공문제의 경우, 포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복잡한 양상을 드러낸다. 정책문제의 크기가 클수록 이해당사자 조직들의

수는 많고, 그만큼 이질적인 이해당사자 조직들이 많이 관련된다. 따라서 요구의 상충성과 양상은 복잡하고 그 강도는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면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더구나 문제해결과정에서 다수이해당사자와 조직의 참여보장과 협력을 필요로 하면서 다양한 의사결정권한의 배분과 연결되므로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다(하민철, 2006).

그 동안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을 주도했던 정부만으로 문제해결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저 출산, 고령화, 양극화, 실업 등 사회문제들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역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 및 이해관계자가 직접 공공문제 해결에 나서는 상황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재난 및 위험관리대책만으로는 모든 부분에 걸쳐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더 이상 충족하기 힘든 상황에서 불신이 깊어간다. 이는 <표 1>에서 보듯이 정책문제의 해결방식과 접근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재원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이해당사자의 관심, 참여가 한층 요구된다(한세억, 2013a).

<표 1> 정책문제 해결방식과 접근

구 분	전통적	현대적	미래지향적
이론적 기반	경쟁력	정책학습/혁신역량	공유가치/정책생태
정책특징	합리, 능률 수동적	효율 능동적	특성화, 다양성 참여자중심
정책구조	문제 지역	모든 지역	모든 지역
추진체계	정부주도/수직적 단순, 합리적	거버넌스/협력적 복잡·관료적	참여자중심/수평적 복잡성/다양성관리
정책절차	하향식/중앙집권적	상향식(협상)/분권적	수요자기반 참여지향 /분권의사결정구조

기존의 정부·관료의 독점적 문제해결방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적 문제해결방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 동안 활발하게 논의된 거버넌스 혹은 정책네트워크 개념들은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과정에 관련 이해당사자 조직들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문제해결방식의 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거버넌스도 기존의 권위적이고 공식적이며 제한적인 영역에서 작동되고 있다. 또한 정형화된 문제해결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 상황이나 환경변화는 문제해결방식의 전환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2. 공공문제에 대한 대안적 시각과 접근

1) 기존의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과 한계

그 동안 사회혁신은 크게 세 가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나타났다. 첫째, 정부, 기업, 심지어 시민사회도 실패해왔던 만성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서 하자센터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새롭게 대두된 사회문제에의 대응으로서 고령화 사회의 해피시니어를 들 수 있다. 셋째, 새로운 방법을 통해 기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대응방식으로서 시민창안프로그램, 싱크카페 등이 예거된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소통, 참여, 협력·협동, 조정과 매개 등이 공통적 요소로 발견된다. 여기서 소통과 참여는 소셜네트워크 등 새로운 정보기술의 적용과 확산으로 인해 활성화되었다. 협력은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조정과 매개는 코디네이터와 중간지원기관 활동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사회혁신은 시민섹터가 주도했으며 사회적 기업, 디자인, 소셜미디어 등과 관련된 사회혁신기관과 활동을 포함한다. 이처럼 시민섹터가 주도하게 된 것은 민간의 창의성과 유연성에 기인한다. 최근에는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해 사회혁신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서 사회적 기업이나 커뮤니티비즈니스, 그리고 협동조합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한세역, 2013a).

또한 자본주의의 인식전환과 정부·기업 간 관계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른바 자본주의 4.0, 창조적 또는 깨어있는 자본주의 등은 자본주의의 진화를 설명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변화의 역사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변화와 새로운 성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막연한 숫자나 현상에 대한 수사학적 내용이 아니라 개념 자체에서 핵심적 의미를 함축해야 그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임채원·김병섭, 2012:295~326).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가치 창출(co-value creation) 또는 공유가치 성장(shared value growth)은 새로운 자본주의 성장모델로서 가능성을 지닌다. 공동가치 창출의 개념은 다양한데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¹⁾들이 공유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가치로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균형성장을 의미한다. 기존의 동반성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체제 구축이라면 공동가치 창출은 가치사슬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체제로서 이해관계자간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공동체의 성장을 의미한다. 즉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경제적 사회적 커뮤니티를 강조하며(Moore, 1996) 지역발전 그리고 기업 간 관계를 넘어 기업과 지역공동체의 학교, 병원 등 사회적 시설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중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시민참여 방

1) 이해관계자는 기업과 그 구성원, 기업의 주주, 협력사, 그리고 고객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치 사슬에 기여하는 주체들을 말한다.

법론 및 제도적인 기반이 미흡하여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한세역, 2013a).

2) 지역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 공동가치창출(Co-creation)

Co-creation은 경영분야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공동가치 활동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웹기반에서 고객의견 반영을 넘어 고객이 직접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증대하고 있다. 생산·소비자 간 교류증대와 지식수준 향상, 정보기술 발전 등이 가치창출과정을 변화시키면서 소비자는 단순히 소비역할을 넘어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가치창출과정에 관여하기에 이르렀다(Duncan and Majority, 2006; 양경렬, 2012). 이에 Co-creation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과 가치창조의 새로운 실천전략으로 주목받았다(Prahalad and Ramaswmy, 2004). 그리고 경영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등 인접학문분야와 융·복합을 통하여 적용범위와 활용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조직도 전자정부시스템을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다. 다원화된 민주사회로 진전하면서 공적 기능도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강조하고 공공부문의 행위주체로써 관리의 책임성, 투명성, 공개성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인 기능통제의 관점에서 새로운 권력분립 모델로 등장하면서 국가권력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수평적인 분립(horizontal separation of powers)과 함께 실효성 있는 권력통제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허영, 2005:806). 하지만 자치제도의 확립성 유지가 자칫 지방의 특수성, 개성, 개별성, 인격, 개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작용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지방의 초기생각, 신선한 발상, 정책의지 등을 저해하게 된다(Lavroff, 2003: 14).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개별 주민들의 각각의 요구를 올바르게 수렴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방 거버넌스의 운영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진국의 지방행정체제는 다원적인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주민과 가까운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안영훈, 2007). 여기서 모바일기술과 시민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전향적으로 개방, 공유, 참여를 진작하는 경우, Co-creation 개념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이나 지역혁신모델의 개발도 가능하다. 그 동안 지역혁신의 방법론으로 corporatism, governance, regional innovation system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공동가치 창출은 기존의 지방정부나 로컬 거버넌스와 구별되는데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거버넌스에서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정책추진과정에서 단편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며 따로 일하고 각각의 결과를 나중에 합치는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공유하며 완성해 나가는 Co-creation과는 구분된다.

또한 필수적 다양성으로 구성된 요소 간 상호의존성이 강하다. 로컬 거버넌스는 중앙과 지방 정부, 정치·사회적 단체, NGO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Kickert, 1997; Rhodes, 1997; 한세역, 2013a).

<표 2> 지방정부와 로컬 거버넌스, 공동가치창출의 비교

구 분	지방정부	로컬 거버넌스	공동가치창출
제 도	적음	많음	필수적 다양성
관료조직	계층적/통합	분산/분절	분산/유연
수평네트워크	폐쇄적	광범위	개방, 광범위
국제적 네트워크	최소한	광범위	광범위
민주적 연계	전형적	전형적+새로운 실험	참여, 소통
정책과정 해결책의 소스	경직됨 지방정부	혁신적, 학습적 지방정부+시민사회	창조적 시민(주민)
중앙정부	직접통제	분권화+최소한의 간섭	협력(파트너십)
리더십	집단적	시장	공동체 구성원
지 향	문제해결	문제해결	문제해결+가치창출

* 자료 : Peters(2001: 17) 가공

반면에 공동가치창출은 시민,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을 중시하며 네트워크가 강조된다. 또한 공동가치창출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자조적 조직간 네트워크로서 기존의 로컬 거버넌스보다 구성원의지, 참여, 책임, 협력이 강조된다. 공공문제 해결을 넘어 가치창출을 위해 정보, 시간 그리고 노력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 그리고 비전과 목표의 설정부터 공감, 동참하며 실행단계에서 자원 확보, 책임과 권한을 분담하여 그리고 성과에 이르기까지 공유한다(한세역, 2013a).

공동가치창출은 소비자와 협력으로 가치를 만드는 것으로 가치창조의 새로운 실천으로 주목받고 있다(Prahalad and Ramaswamy, 2004). 오늘날 기업은 생산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지만 다른 기업과 차별화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생산과 서비스에서 더 많은 선택을 한다. 나아가 가치의 의미와 가치창출과정의 공급자·생산자 중심에서 수요자·소비자경험으로 이동 중이다. 능동적인 소비자들이 공식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권한을 갖고 기업과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의 상호작용에서 가치창조와 가치추출(value extraction)의 중심이 된다. 시장은 소비자, 소비자 공동체, 그리고 기업 간 상호작용을 위한 포럼으로 작동되고 있다. 여기서 대화, 접근성, 투명성, 위험-편익의 이해는 가치창출의 중심 요소다. 이러한 현상은 고객과 직접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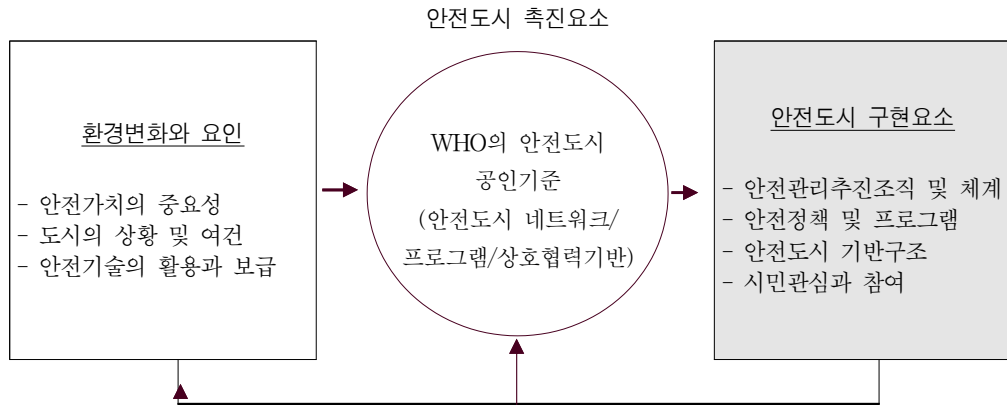
하며 정보 접근권한을 제공하고 투명성을 높이면서 어떤 생산물을 원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결정할 수 있게 한다. 그 가능인자로서 정보기술은 끊임없는 다양한 생산이 가능하게 하고 개별적 소비자에게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간 협력에 의한 가치창출과정에서 소비자들은 협력, 연결성,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다(Brugman & Prahalad, 2007; Prahalad & Ramaswamy, 2003, 2004, 2005). 공동가치창출은 네트워크와 공존하며 협력의 바탕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임채원·김병섭, 2012: 295~326). 그리고 공동가치 창출을 통하여 경쟁우위를 넘어 생존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변화흐름을 추구하는 접근과 전략으로 의미를 지닌다(한세억, 2013a).

3. 안전관리체계 프레임: 분석기준 및 요소

오늘날 도시는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나 도시의 성장과 관리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 국가와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공공의 역할은 불가피하다. 지역 및 도시개발의 이념이자 원칙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킴 없이 현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이다. 여기서 지속가능성은 환경친화성, 경제성, 주민정서와 조화를 이루는 개념이며 공공성과 함께 안전도시 이념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도시 기준은 일곱 가지로 제시된다. ①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의 상호협력 기반의 구축(안전도시위원회, 안전네트워크 구축 등) ②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발굴(가정/교통/지역/재난재해/산업안전 등) ③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증진프로그램(영유아/어린이/노인/장애인생활/취약계층생활 등) ④근거에 기반 한 프로그램 마련(안전도시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등) ⑤손상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수행) ⑥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방안(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⑦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의 참여 및 협력방안(안전도시 워크숍 및 연차대회 참석) 등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 틀로 제시된 <그림 1>은 안전도시 분석대상사례의 비교연구를 위한 예비적 프레임워크이다. 여기서 안전도시 사례의 분석과정은 세 가지 범주 내에서 구분된다. 첫째, 환경적 변화로서 안전가치와 요구, 안전관련 제도 및 기술의 적응과 흡수의 측면이다. 둘째, 안전노력으로서 안전네트워크, 프로그램, 협력기반 등 안전축진요소의 측면이다. 셋째, 사회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안전도시 관리체계, 안전정책(프로그램), 안전기반 구조, 시민참여와 관심 등 안전관리체계의 측면이다. 이하에서는 경험적 현상의 미성숙으로 인해 적용과 해석이 가능한 측면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한세억, 2014).



<그림 1> 사례분석을 위한 증거 틀

Ⅲ. 국내외 사례분석 : 비교분석 및 시사점

위험요소의 동시성, 다발성, 속보성으로 인해 안전프로그램은 특정지역과 공간에 국한하기 어렵다. 이에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관리조직을 조직하고 지역수준의 안전관리기구와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초점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기반시설보호와 함께 통합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현실세계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운영 및 국민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유지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공공부문 노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우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환경에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1. 천안시(한국)의 안전관리체계와 프로그램

천안시는 1995년 천안군과의 통합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성장속도가 가속화됐다. 2004년 고속철도 개통, 2005년 수도권전철 개통,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시민손상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시는 시민을 정신적·신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시작했다.

충남지역은 자살사망률이 제일 높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도별 자살률 현황(인구 10만 명당)에 따르면 천안은 2006년 19.7명, 2008년 21.3명, 2010년 34.5명으로 자살

률이 꾸준히 증가했다. 인구 30만 명의 천안인구 절반인 아산지역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06년 29.3명에서 2010년 33.1명으로 평균 33명을 넘었다. 우리나라 평균자살률(2006~2010년)이 26.9명을 감안하면 천안-아산지역 모두 전국 평균을 잇돌아 대책마련이 필요하였다.

천안시는 지난 10년간 인구가 16만 명, 예산이 2.4배나 늘 정도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시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범죄예방 없이 안전도시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등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영상샷티드(CPTED·범죄예방설계) 도입,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운영, 첨단 방범장비 설치 등 7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강조했던 U-Safe City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2007년에는 전국 최초로 '천안·아산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시민안전을 지키고 범죄발생 최소화를 위해 CCTV 등 치안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시책을 꾸준히 마련하였다.

2009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신청 당시 천안시는 유아에서 노후까지 평생 안전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삶을 비전으로 안전도시 사업의 우선순위 영역을 자살 예방, 운수사고 예방, 범죄로부터의 안전,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안전도시사업의 협의기구 및 전담부서 운영, 사업추진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손상감시체계 구축, 성과관리프로그램 개발 등 기본계획을 설정했다²⁾. 아울러 조례제정, 전담반설치, 지역기반 연구와 정책자문, 안전사업 협력지수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주민의 안전가치와 요구³⁾를 반영한 제도적 연구개발 및 활용으로 이해된다. 실례로 안전복지마을 조성, 안동안전학교 운영, 노인안전환경 표준화 등 프로그램 개발과 자살예방 통합지원체계,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위기학생 지원관리 등 인프라 구축, 시민안전모니터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과 안전정책과정 참여 등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구성요소를 마련했다.

지난 2011년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인명과 재산피해 ZERO 실현을 위해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점검을 통해 피해최소화 대책을 추진하였다. 특수시책으로 이·통장을 현장재난 상황관리관으로 임명하고 자연재난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예찰활동 및 재난방송 등을 통해 민간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시는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한전, 전화국,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별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2012년 12월 아동과 여성,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및 안전망

2) 2005년 당시 인구10만 명당 손실사망 57.4명, 자살사망 22.6명, 교통사고사망 10.8명, 보행교통사망 7.5명, 기타사망 16.5명을 2012년 20%, 2017년 50% 감소시키는 목표를 세웠다.

3) 천안시가 시민(1922명)을 대상으로 천안시 미래비전에 대한 시민조사결과, '친환경 안전도시'(29.3%)로 발전하는 것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굿모닝충청, 2013년7월2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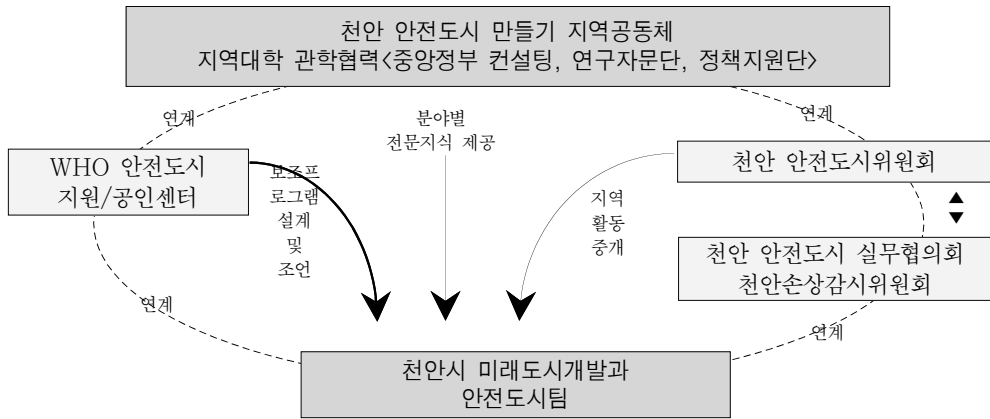
구축을 위해 안전지역 연대활동을 강화하였다. 특히, 여성과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과 성폭력, 가정폭력 등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민관협력·연계와 지원, 정보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과 피해자 치료 및 보호, 예방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연대사업과 안전프로그램들은 안전가치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안전기술의 적응과 흡수를 통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어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의 바탕에서 참여를 유도하였다(한세억 외, 2013c).

천안시의 국제안전도시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실무추진 TF팀을 구성해 2007년 1월 안전도시 및 행정협의회 운영 지자체 견학과 손상현황을 조사하였다. 같은 해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5월 천안시 안전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해 제 1회 천안 안전만들기 포럼을 개최했다. 이어 안전도시 만들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11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직무교육에 이어 태국과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안전도시학회에 참가했으며 워크숍과 포럼을 개최했다. 2008년 1월 천안 안전도시 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공인준비도시 중재를 신청했다. 같은 해 3월 일본 가메오카시 안전도시 공인식 및 국제컨퍼런스에, 10월 뉴질랜드에서 열린 국제안전도시학회에 참가했다. 2009년 3월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현지실사 대비 실무협의회 워크숍과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최했다. 2009년 4월 WHO 국제공인센터 관계자의 현지실사에 이어 2009년 10월 27일 대한민국에서 5번째, 세계에서 169번째 도시로 공인 받았다⁴⁾.

한편, 천안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이후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⁵⁾. 우선 안전도시 시스템 마련을 위해 안전복지마을 조성, 공공시설 응급처치장비 구입, 자살예방 지원, 안전사업 협력 등 4개 분야 31건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령 심장자동전기 충격기 비치, 고위험군 자살예방 캠프, 음주예방교육교재제작 보급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 추진체계로서 <그림 2>에서 보듯 안전도시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의 바탕에서 2016년에도 ‘안전천안’ 실현을 위해 중장기 종합안전네트워크 구축, 119안전센터 건립, 백석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다양한 안전사업을 추진 중이다(한세억 외, 2013c).

4) 주성환 생활안전팀장은 “안전도시는 비교를 하자면 대학원생이 일정한 교육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것처럼 모든 손상으로부터 안전이 아닌 지역공동체가 협력해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만들어 가는 체계구축에 대한 인증”이라고 슬회했다.

5) 최용인 안전방재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 천안’이 될 수 있도록 시민생활 안정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계획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림 2> 천안시 안전관리 추진체계

2. 리드세핑(스웨덴)의 안전관리체계와 안전프로그램

스웨덴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낮은 안전국가다. 스웨덴 자치 시 가운데 리드세핑은 1989년 WHO로부터 세계 최초로 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도시다. <표 3>에서 보듯 지역공동체 특성에 맞는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활동을 연령 및 환경 별로 구분, 전개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안전문제는 복지의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세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적은 나라,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가장 잘 실시하고 있는데 3대 안전교육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위주의 어린이 조기교육이다⁶⁾. 각 지역별로 설치된 Safe Kids Club에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가입하여 연령별로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사례중심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꾸준히 받는다. 둘째, 사고사례중심의 실습교육이다. 안전교육의 근본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에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론교육보다 실제 도로현장에서 실습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스웨덴은 1997년부터 “비전 제로(Vision Zero)”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대책을 진행하였다. 특히,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한 교통시스템 설계에 노력하였다(조한선, 2008). 셋째, 사회적 공동체의식을 중시한다. 모든 어린이가 다 내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어른들이 실제 도로현장에서 어린이들을 적극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help(도움을 주고받는 것) 문화’의 전통⁷⁾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배려하는 풍

6) 가령 어린이는 3세가 되면 각종 그림 자료를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교재가 우송되어 가정에서 안전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토에서 안전 인프라와 함께 안전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지역의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안전 프로그램의 평가와 개선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스웨덴의 시민들은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대형 긴급사태시 '시행정위원회'는 자치 시에서 최고 담당기관으로서 관할지역에 위기관리와 대피명령을 실행한다. 지역수준에서 주행정위원회는 공공과 민간사이에서 대피, 실행, 위기 및 취약도 분석 등의 CEP행동에 책임이 있고, 위기상황발생 중에는 책임수준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조정한다. 주행정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대형재난에 있어 국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며, 주요 긴급사태, 위기, 재해에 있어 대중매체와 협력한다. 그리고 응급, 소방, 경찰 등 스웨덴의 모든 비상전화는 112로 통합하였다. 리드세핑은 안전도시 구현과정에서 시민참여⁷⁾가 활발하였는데 기존의 민·관 협력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관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민간기업 및 일반시민의 참여가 활발하다. 안전도시 사업은 관변단체 외 민간기업, 비정부 시민단체 및 일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증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한세억, 2014).

스웨덴의 정부부처는 자신업무와 연관된 시민비상계획을 담당한다. 각 자치구에는 선출직인 자치위원회에서 임명된 집행위원회가 있고 자치정부는 세금징수의 반대급부로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기초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웨덴의 시민비상계획은 시민위기관리청(MSB)의 조정을 받는다. 여기서 MSB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위험부터 주요 국가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요한 위험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발생하는 위기사태에 대한 대응을 주관한다. 중앙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1974년에 설립된 재난의료연구기관(KAMEDO)는 의료적 관점에서 국가와 국제재난을 분석, 파악한 후 경험을 추가해 공식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바탕에서 보건복지부는 재난의료계획을 수립하고⁸⁾ 재난관리 표준화와 감시활동에 책임을 진다. 주요업무는 안전, 개인의 권리, 전문가로서 중재, 개발과 훈련참여 측면에서 의료사회적 케어의 감시이다. 또한 적절한 재난의료계획의 책임은 시의회에 있다(한세억 외, 2013c). 스웨덴은 지휘와 통제를 위한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⁹⁾ 동 시스템은 재난상황에 대한 유용한 자원과 인과성의 수(數) 정보를 가능하게 한다.¹⁰⁾

7) 국제안전도시인 스웨덴 낙카(Nacka)에서 안전한 시니어센터로 공인을 받은 Ektorp의 프로젝트 매니저 Kerstin Seipel은 “세상에 완전하게 안전한 도시는 없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문화를 만들고 불안감을 주는 요소를 점점, 개선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8) www.sos.se/sose/kamedo.htm

9) 스웨덴은 정부위원회로서 기후변화와 취약성 위원회(Governmental Committee on “Climate Change and Vulnerability”)를 설립(2005),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안전 등 각종 위험분석시스템을 활용 중이다.

〈표 3〉 리드세핑의 안전도시 프로그램

구분	유형	주요 내용
연령에 따른 추진 프로그램	0~14세	예비부모 그룹미팅, 출산 후 부모 그룹미팅, 어린이안전시트 대여, 어린이 자전거 헬멧 할인제도, 안전한 자전거타기 홍보, 운동장, 놀이터 안전점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방신문 사설기고, 7~13세 대상 교통안전교육, 부모시내 순찰단 운영(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15~24세	19~24세 젊은 층 운전자 안전교육/마약과 음주에 대한 지자체 정책/지역상징 자전거헬멧개발/마약과 음주관련 부모, 자녀 상담소 개설 운영, 범죄예방을 위한 이웃 간 협조체계 구축
	65세 이상	안전체크리스트 개발 홍보, 텔레폰 서비스 라인, 양로원에 사고손상 드록 시스템 구축, 기초건강관리센터에 안전용품 전시, 안전용품 브로셔 발간
환경에 따른 추진프로그램	가정	안전체크리스트 개발 홍보, 텔레폰 서비스 라인, 양로원에 사고손상 드록 시스템 구축, 기초건강관리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집중적 안전프로그램 개발 운영터에 안전용품 전시, 안전용품 브로셔 발간
	교통	Vision zero 프로그램 : 장기적인 스웨덴내 교통사고 제로화 프로그램/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안전도로 건설/겨울철 낙상방지를 위한 무료 모래 배달 서비스 의회 교통안전위원회, 장애인 위원회 정책 활동에 지역단체 참가
	학교안전	교내 사고손상 등록시스템 구축, 학교 폭력조직 방지대책,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교통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활동, 친구후견인제도
	폭력예방	학부모 순찰, 마약예방프로그램
	스포츠 안전	스포츠관련 약물남용예방대책, 응급처치 및 수영교육, 안전벨트착용프로그램

-자료: 한세익(2014)

3. 토론토(캐나다)의 안전관리체계와 안전프로그램

토론토는 북미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에 속한다. 안전도시의 운영주체는 토론토시민이다. 시민중심의 안전도시 형성 및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최초 안전에 관심을 가진 지역의 시민단체들, 가령 각종 손상예방 조직들, 음주운전 방지운동 등이 함께 지역안전에 관심을 갖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발전하였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캐나다는 부총리산하에 공공안전비상대비부로 위기관련 기관을 통합, 운영하고 있지만 안전도시는 NGO차원에서 추진되고 연방정부 역할은 미미하다. 이처럼 캐나다 안전거버넌스의 특징은 주로 민간주도이며 관에서 주도하는 거버넌스의 경우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한다. 강조분야에 따라 범죄, 건강, 교통, 유해산

10) 예를 들면 병원에 환자를 할당하는 것과 같은 정보데이터베이스이다. 모든 사람이 재난상황에서 동 시스템 사용을 익숙해지기 위해 구급서비스에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스웨덴도 '민간비상기획본부'와 '심리전위원회'를 통합해 비상관리청(SEMA)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업물, 환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가적 플랫폼으로서 Canada's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DRR)는 2009년에 재해경감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공공, 개인, 학계, 시민사회, 기업과 원주민그룹 등)의 네트워크다. 여기서 재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 분야의 연구와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의 방재를 위한 주민참여 네트워크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위기에 대비하여 자원봉사 그룹의 발전과 협업 능력을 향상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토론토의 도시위기관리는 시정부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시민중심의 안전문화도 강조되고 있다. 그 배경은 관 주도 안전도시계획의 자칫 관료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 계획이 변경 또는 폐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주도해야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철저하게 시민중심운동으로 운영되고 재원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물론 지방정부지원을 받거나 Canadian National Railroad 같은 기업의 후원을 받기도 한다(한세억, 2013b).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스스로가 자체적 해결을 위하여 각종 안전관련 정보 및 안전패스포트 등을 제작하여 인증,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리적 및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기도 한다. 토론토의 안전업무 프로세스는 각종 손상예방조직들, 음주운전 방지운동 등 안전에 관심을 가진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협의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리더십테이블 구성단계(Safe Community Leadership Table)에서 시민주도로 지방정부, 보건소, 경찰, 소방, 학교 등 안전관련 약 25명의 주요 행위자들을 모아서 협의를 통해 각종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려 노력(reference group)하고 있다(한세억 외, 2013c).

토론토의 안전도시 프로그램은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 특징은 지방정부 지원과 각 단체, 기업과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안전도시 재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기관의 연합체인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가 존재하며 안전 도시를 공인받기 위한 노력은 다른 도시와 상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사업들이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WSIB)'라는 정부기관의 지원 하에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단체 간 체계적인 라인이 형성되고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직장 내 안전사고 방지프로그램의 경우, 가연성이 강하거나 폭발가능성이 높은 화학약품에 대해 사전교육으로 인지기킴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청소년에게는 사전에 사고를 인지시키는 손상방지인지프로그램을 교육시킨다. 사고경험자가 언제, 어떻게,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 설명, 질문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은 자동차사고, 음주, 춤, 스포츠 등 위험을 수반하는 행동에 Buckle up, Drive Sober, Look first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사고나 위험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있다(한세억, 2014).

〈표 4〉 토론토의 안전도시 프로그램

대 상	주요 프로그램
직장 내 안전	- Safe Communities Incentive Program(SCIP) - International Programme on Chemical Safety(IPCS) - NOISH Manual of Analytical Methods(NMAM)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 HEROES : Peer to Peer - IAPA에 의한 PASSPORT 프로그램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 노인낙상방지를 위한 Steady As You GO(SAYGO) 프로그램 - 마약 및 알콜 방지 프로그램 : Racing against DRUGS -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 Risk Watch
교통안전프로그램	- 자동차 안전벨트 및 자전거 헬멧 프로그램 - 안전시트 클리닉 프로그램

-자료: 한세익(2014)

또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 패스포트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¹¹⁾. 기업은 학생들의 패스पोर्ट를 고용의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패스포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유도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프로그램으로 1학년부터 8학년까지 각 학년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교육시킨다. 각 단계별 내용은 ①안전벨트 착용 등 자동차안전 ②화재와 화상에 대한 응급대처방안 ③음식 등에 기인한 목 메임, 질식예방 ④독극물안전 ⑤미끄럼방지 ⑥충기에 의한 손상방지 ⑦자전거 및 보행자안전 ⑧익사방지를 위한 수상안전 등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어린이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Elmer the Safety Elephant'을 사용한다. 각각 프로그램들은 우선순위 선정 추진 후 성과평가가 이루어진다. 즉 안전도시재단의 양식에 따라 안전도시 공동체는 매년 성과평가를 자체 수행하여 안전도시재단의 online website을 통해 제출하고 있다(한세익 외, 2013c).¹²⁾

4. 평가적 논의와 교훈

1) 안전도시 사례에 대한 평가적 논의

안전도시 사례를 비교하면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안전도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11) 가령 패스포트에는 학생이 안전도시연합체와 관련한 제반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력을 적어 넣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응급처치법, 수상안전자격증, 운전프로그램, 아이보호과정 등 한 단계의 교육을 이수하면 패스포트에 기록된다.

12) 캐나다 안전도시관계자와의 면담결과를 인용하였다.

노력은 각국 및 지역 별로 상이하지만 안전도시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제도적 등)와 행위변화(개인 및 그룹, 조직 등)를 통하여 손상과 불안감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지역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고, 권장절차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안전한 지역공동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한세역, 2013b). 첫째, 추진배경과 관련하여, 대부분 안전 도시들은 손상예방의 중요성을 인식, 예방노력을 강조하였다. 가령 폭력 등 고의적 사고예방과 고위험그룹에 대한 보호, 손상감시 및 자료공유 등이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다. 리드세핑은 공중건강위원회(Public Health Council)를 설치하고 고위험 환경 및 계층에 대한 안전프로그램 수행뿐만 아니라, 사고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토론토의 경우,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라는 슬로건 하에 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지역구성원 간 안전도시 목표에 대한 합의, 시민과 공공부문,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 그리고 기업·사회와의 공생을 통한 안전가치 창출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

<표 5> 국내·외 안전도시 사례

도시명	천안시(한국)	리드세핑(스웨덴)	토론토(캐나다)
추진 배경	인구 급속한 증가 및 사망률의 급증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비용 증가,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취약 등 환경적 제약	전체 사망자의 5%가 사고손상이 주요 원인이었음(동맥질환, 폐질환, 중앙에 이어 4번째 원인으로 나타남).	안전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 토론토시정 차원에서 추진(캐나다 전역에 걸쳐 안전도시 확대계획의 실천)
프로그램	자연재난 예방 및 지역 연대 사업/안전사고예방프로그램/한 국형 안전도시 시범사업	-사고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 참여 -지역중심의 프로그램 발굴, 운영 -사고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	특정대상 및 프로그램기반 사업 발굴, 추진(직장 내 안전증진, 청소년/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교통안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안전 관리 체계	안전도시실무협의회 안전도시 만들기 지역공동체 및 지역대학 학관협력체	-중앙정부(보건복지부:KAMEDO/재난관리청:MSB)는 감시 및 표준화 업무를 담당함. -시의회는 재난의료의 실제적 책임을 지고 있음.	-정부차원에서 부총리산하에 공공안전비상대비부로 위기관련 기관의 통합 운영 -NGO 및 시민주심에서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중임
특징	지역주민의 안전 및 삶의 질 증진, 건강도시 환경조성,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경제적 수준 향상 등 천안시민의 건강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둠	-지역공동체의 트경 및 지역주민 요구에 부응한 프로그램 개발 -시민관심과 참여 ※1989년 최초로 WHO가 공인하는 국제 안전도시로 공인	시민 주도로 지방정부, 보건소, 경찰, 소방, 학교 등 안전관련 주요 행위자들간 협의를 시작하고 각종 이해당사자들을 포함.(Safe Community Leadership Table 운영)

둘째, 안전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례도시들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프로그램이 개발, 실행되고 있다. 사고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령 및 환경, 대상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형성된 안전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 많은 도시에서 안전관련 사업들이 단기간에 종료되거나 전시성 운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도 대조적으로 안전도시들은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셋째,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안전도시에서 민·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안전네트워크로서 협력체계 구축과정에서 각종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상호간 협력, 정보공유 등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사례도시들은 자발적인 지역주도와 책임으로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토론토의 경우, NGO차원에서 추진하였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연방정부 역할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선진사례와 비교할 때 안전도시 인증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주체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들이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는 부족했다(정지범, 2013:41-42). 넷째, 안전도시의 특성과 관련하여 도시의 인구규모와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외국사례도시의 경우, 해당국가에서 최초의 공인을 받은 도시로서 안전도시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가능한 장기적·지속적 프로그램과 함께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2) 안전도시 사례의 교훈

각국의 안전도시는 역사, 문화, 정치, 지형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의 경우, 비교대상국에 비해 자치단체장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즉 해외의 경우, 상향적이며 수요자 지향적 접근이 강한 반면, 국내도시는 하향적이며 공급자위주의 성향을 드러냈다. 즉 안전도시사업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수준에서 거버넌스가 구축되었지만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였다¹³⁾. 또한 해외사례는 재공인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안전생활화 양상을 보여주었지만 국내의 경우, 재공인 이후 노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국제안전도시의 공인기준에서 보듯 기업이나 행정기관에서 수행해온 안전사업들이 지역사회라는 큰 틀에서 함께 참여하고 분석·공유하는 프로세스이므로 지역에서 시행되는 안전관리활동들의 절차만 일부 보완한다면 적용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웨덴의 경우, 안전의식 및 활동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안전문화로 발현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부모들은 '내 자녀의 안전은 국가·사회·학교가 지켜주는 것이

13) 가령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국토해양부, 2008), 방재마을 사업(소방방재청, 2009), 안전도시 사업(행정안전부, 2009), 마을안전망구축 사업(서울특별시, 2012)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니라 부모가 지킨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교육의식 덕분에 스웨덴 어린이들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자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대조적이다. 국내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지도력, 조직구조, 사업, 정책수단이 단기간에 집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안전이 지자체 공무원이나 정책에서 이념 및 의식으로 나타나기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단체장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식도 강해야 한다. 안전가치는 여러 기관과 단체 간 협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¹⁴⁾. 또한 생활 속에서 유·무형의 안전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이 가운데 거주지역의 위험요인이 정량적으로 확인되도록 안전DB(혹은 손상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개방적 접근이 요구된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위험요인들에 대해 직관적·경험적으로 이해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부족하다. 안전DB는 주민생활권중심의 동단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누가(피해자), 어디에서(환경), 어떻게(행위)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손상지표를 통한 상황인식과 안전규범, 안전행동관리 및 실천 등이 구체화될 때 생활 속에서 안전가치의 체감수준이 높아질 것이다(한세영, 2014). 실제로 국제안전도시는 기업이나 행정기관 위주에서 지역공동체 전체의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구호로 외치는 안전이 아닌 시민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을 요구한다. 세계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안전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의 안전체감정도를 증가시키면서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안전도시 인증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안전캠페인’으로 체화되어 가치로 발현되어야 한다.

IV. 시민참여기반 안전관리체계의 가능성과 실천과제

1. 안전도시의 구축 및 운영의 핵심요인

도시의 재난관리(방재행정)는 복잡다양하다. 거대한 시설물과 과밀한 인구구성과 함께 그 범위가 크다. 따라서 재난관리시스템 구성은 크게 재난관련법¹⁵⁾, 시스템, 계획, 교육·훈련, 위험평가시스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안혁근 외, 2009). 첫째, 안전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

14)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조준필소장의 인터뷰내용임(경상일보, 2013년7월11일자)

15) 우리나라는 20개 부처에서 116개 법령, 1만9,000여건의 안전관련 규정을 운영 중이다. 이처럼 기준마다 중복되거나 다른 잣대의 적용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화학물질 벤젠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위험물 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각각 관리되고 기준도 상이하여 안전관리가 허술하다.

및 법령체계 정비, 기관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도시 추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증진에 책임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Bullock et al., 2008). 물론 단체장, 지방공무원 및 관계기관 구성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리더십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주민, 기업, 자원봉사자, NGO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적 분위기와 풍토조성이 필요하다. 안전프로그램의 발굴, 시행과정에서 주민 및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가령 인턴,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방과 후 하교 길 어린이놀이터 및 취약시간대 순찰활동 강화,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 및 생활 터 안전 가꾸기 사업, 안전체협교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이벤트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한다.

셋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등 소프트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①지역사회 내 교통안전 예방정책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 방안 ②범죄예방사업 추진 등의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 ③식중독예방 및 유해식품관리,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각종 전염병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④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증진 프로그램 ⑤학교, 놀이터, 쇼핑센터, 일터 등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내 각종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등 다양한 안전관리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넷째, 안전인프라는 위험요소 및 각종 시설장비·기술정비 및 안전정보 구축 등 하드웨어적 환경기반을 말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각종 건축물, 시설 등을 정비하여 각종 재난·재해 대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수돗물, 약수터, 소화천 등 깨끗한 수질 관리 방안 및 기타 지역사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손상의 빈도와 원인, 지역 내 자연재해 피해 및 취약지역 관련 정보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CCTV, U-City 등 정보기술이 활용된 안전정보체계를 구축, 관리해야 한다(한세억, 2014).

2. Co-Creation기반 참여지향 안전도시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안전도시가 하나의 유기체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력과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 더구나 국가와 지역사회 전체를 안전공동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주도형 등의 참여에 의한 상향식 접근을 촉진시키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Co-creation기반 안전도시 추진 전략은 지역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는 주민자치활동이다. 여기서 정부의 지원은 주민의 자발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시민참여와 협력의 기반으로 정보통신기반의 활용이 필요하다. 여기서 협력과 참여는

공공부문에서의 부처 간·분야 간 협력뿐만 아니라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 인접한 도시나 국제적인 협력까지 포함한다.

지역마다 잘 구축된 정보통신기반을 안전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고도화된 정보인프라를 안전프로그램의 기반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가령 경찰서 교통사고, 소방서 구급활동, 학교안전공제회, 통계청 사망원인, 학교기반 손상감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손상안전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웹기반 손상감시시스템이 필요하다. 동 시스템은 지역사회 진단, 손상사망, 손상부상, 환경 및 안전진단, 고위험군 진단 등에 대한 지표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손상안전 현황을 제공하고 사용자검색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손상안전 지표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손상안전관련 통계지표 제공에 의한 손상안전 정도와 범위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별 특징에 따른 고위험군, 위험환경, 위험요인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Minho Song, Seongiin Hwang, Jungmin Yun, Peom Park, 2012). 도시 안전을 위한 핵심 중의 하나는 현장에서 즉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확한 정보라는 점에서 안전정보의 통합과 공유,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활동이 필요하다. 더구나 최근의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환경의 변화와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의 발전, 그리고 Web환경의 변화는 재난방재 분야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함께 이용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업과 공공분야에서 시민참여 확대의 필요성은 소셜네트워크의 발전이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과 맞물려 활발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민 참여적 안전 Co-creation체계는 필요성과 유용성을 충족한다. 주민과 일반인들을 재난방재과정에 참여시켜서 계획 및 재난방재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현지사정이나 실제경험은 오히려 주민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전문가나 해당 공무원들의 도움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계획 및 시행 과정에 참여를 촉진하는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현대사회는 자연재해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위험사회다. 더구나 한국은 초 위험 사회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위험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공급자중심의 하향적 성격이 강하다. 지역상황, 지역현실과 여건, 지역주민의 요구 및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정부 주도의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IT기반 안전관리시스템에 네트워크화, 지능화, 기능화를 접목하면 기존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이를테면 Open API Mashup 등을 활용하여 시민 참여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기정훈, 2012). 물론 구현 및 운영과정에서 재난관련 행정기관, 전문가그룹,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다양한 상황별 실현가능한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해외도시의 경험적 사례를 교훈삼아 정보통신기반 안전프로

그램을 적극 발굴, 활용해야 한다.¹⁶⁾ 가령 국제적으로 SNS를 이용한 재난대처 및 정보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지난 2007년 케냐의 비영리 기술기업 우샤히디(Ushahidi)가 개발한 재난지역 구호활동용 온라인지도 플랫폼이다. 당초 케냐에서 부정부패 차단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과 인터넷 등을 이용해 즉각적으로 상황제보 및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구호활동 서비스로 발전하였다¹⁷⁾. 그리고 아이티 대지진, 러시아 산불, 런던 지하철 파업 등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대처능력을 고양시키며 구호활동을 지원하면서 재난관리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발전하여 인명구조, 건물파괴, 범죄, 질병 등의 대응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자주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장치들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참여지향의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안전 Co-creation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스웨덴처럼 지역공동체의 위험관리책임그룹(경찰, 소방, 시민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협력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정부동원에 의한 수동적 참여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협력적 파트너십의 바탕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발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중심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 보호가 요망된다. 지속가능한 안전 Co-creation 체계는 시민참여기반에서 안전도시 관련 법제도와 관련된 운영시스템, 안전한 생활공간을 위한 교통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 각종 재난재해관련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정책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다. 성공적인 안전도시 모델의 적용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체감도의 향상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으며 이는 곧 안전도시의 기반이 된다(한세익, 2014).

16) 지난 2011년 7월 서울에 새벽부터 내린 폭우로 시내 곳곳이 침수되고 도로가 막히자 출근시민들은 당황했을 때 SNS가 위력을 발휘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117으로 침수된 도로가 어디인지 교통 상황이 어떤지를 공유했다.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한 SNS는 실시간 재난방송 그 자체였다(조광현, 2011).

17) 우샤히디는 아이티지진, 러시아산불, 칠레지진, 영국지하철 파업 등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활용되었다.

V. 결어

안전 없이 인간의 행복실현은 불가능하다.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에 맞는 안전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자체의 경쟁력, 그리고 도약을 위해 안전도시의 역량강화가 급선무다. 무엇보다도 사전재난취약 요소 감시, 신속한 전파, 초동대응을 위한 과학적 인프라로써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확충으로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지역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 안전문제 해결과 가치창출을 위해 Co-creation을 적용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안전문제의 성격과 범위와의 상이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 해결되기는 쉽지 않으며 정부 및 소수엘리트의 힘만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고 지역공동체가 당면한 고질적 안전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Co-creation전략의 실천을 위해 시민협력의 바탕에서 공공성과 혁신원리를 조화롭게 응용하여 수요자입장에서의 인식, 행태변화,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이나 자원 확보 등은 필요조건이다.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의식의 바탕에서 지역사회단체나 기업·시민 등 지역공동체가 능동적인 의지를 갖고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전도시 지향과정에서 새로운 기구나 조직보다도 지역특성과 상황에 맞는 안전프로그램 발굴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관심과 협력, 소통과 참여가 수반될 때 비로소 안전문제 해결과 가치창출에 필요한 역량이 갖추어질 수 있다. 관주도의 하향적 추진방식으로 다양한 안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성공적 지역안전 Co-creation구축을 위해 지역주민 스스로 관리하면서, 관련 의사결정 역시 주민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4). 인권백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기정훈(2012). Open API Mashup 활용한 시민 참여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가능성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7 No. 5, May
- 김영평(1984). “정책연구의 성격과 범위,” 『한국행정학보』18(1): 91-102.
- 정지범(2013). 지역안전거버넌스의 구축의 한계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92호)
- 안영훈(2007). 지방거버넌스 체제의 다양화 방안 : 새로운 ‘지역정부’ 구상과 지방정부 조직·운영 체제의 다양화 방향.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안혁근·정지범·김은성(2009). ‘안전한 나라 만들기’ 위한 안전도시 모델 개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양경렬(2012). 신시대의 마케팅 전략 Co-Creation 전략 어디까지 와 있는가. 『광고계 동향』, Vol. 257.
- 유현정·이재은·류상일(2007). 취약소비자 생활안전 위해관리: 아동 및 노인 소비자의 안전 실태 및 발전 전략. 국가위기관리연구. 1(1): 20-40.
- 임채원·김병섭(2012). 글로벌 위기의 대응으로서 공유가치성장과 관계국가모형, 행정논총, 제50권 3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95~326.
- 조광현(2011). IT를 활용한 재난관리, 전자신문, 2011.12.28.일자.
- 조한선(2008). “북유럽국가의 교통연구원,” 『교통 8-9』, 한국교통연구원.
- 하민철(2006). 정책문제해결기구의 설계와 제도화 과정:: 김대중 정부 시기 노사정위원회 (1998-2002)를 중심으로, 동계학술대회.
- 한세억(2013a).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Co-creation 접근의 가능성과 한계, 『행정논총』제51권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한세억(2013b). 선진도시의 도시안전 사례, 『부산발전포럼』7-8월호.
- 한세억·홍혜승·주선옥(2013c). 선진 안전도시 관리체계와 적용방안 연구, 『학연연구』, 2013 - 10-50.
- 한세억(2014). 안전도시의 재난관리체계와 프로그램 비교연구. 『지역발전연구』.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스마트 시대의 재난재해 대응 선진사례 분석』.
- 허영(2005).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 Bullock, J.A., Haddow, G. and Haddow, K.S. (2008). *Global Warming, Natural Hazards, and Emergency Management*. NW: CRC Press
- Brugmann, J. & Prahalad, C.K.(2007). *Cocreating Business's New Social Compact*.

- Boston: Harvard Business Press.
- Duncan, T. and Majority, S., "How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s 'Touch Point' Can Operationalize the Service-Dominant Logic?," In: Vargo, S. L., Lusch, R. F., (Eds.), *The Service-Dominant Logic of Marketing: Dialog, Debate and Directions*, M.E. Sharpe, Armonk, New York, 2006, pp.236-249.
- Kickert, W. (1997). Public Governance in the Netherlands: An Alternative to Anglo-American Managerialism. *Public Administration*. 75: 731-752.
- Lavroff Dmitri Georges. (2003). *La République décentralisée*, Paris, L'Harmattan.
- Moore, Michael (1996). *Downsize This! Random Threats from an Unarmed American*. New York: Harper Perennial
- Minho Song 외(2012). Development of web-based injury surveillance system using clearing data, 대한인간공학회 2012 3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제 14회 한·일 공동심포지엄, 208-212.
- Prahalad, C.K., & Ramaswamy, V.(2003). *The New Frontier of Experience Innovation*. *Sloan Management Review*, Summer, 12-18.
- Prahalad, C.K., & Ramaswamy, V.(2004). *The Future of Competition: Co-Creating Unique Value with Customers*. Boston: Harvard Business Press.
- Prahalad, C.K., & Ramaswamy, V.(2005). *Building New Strategic Capital for Co-Creation*.
- Rittel, H and Webber, M(1973), Dilemmas in a General Theory of Planning, *Policy Science*, 4: 155-169.
- Rhodes, R.A.W. (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한 세 역: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1998), 현재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과 창조성, 지역정보화, 전자정부, 정보정책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정보통신 기술과 행정(2014: 공저)』,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2012: 공저)』 등 단행본과 연구논문으로는 “정책지식의 생태학적 접근: 한·미 전자정부정책 비교분석(2013)” 등이 있다(sehan@donga.ac.kr).

